

이덕일의 '역사의 창'



검찰과 공수처

흔히들 제멋대로 된 판결을 '원님 재판'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인 조선의 원님들이나 고려의 원님들이 들으면 큰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원님 재판' 이지금의 재판보다 훨씬 공정했으니까 말이다.

고려 우왕 1년(1375)에 원님 즉 지방 수령이 해야 할 '수령 5사(事)'가 정해졌다. 농토를 개간하는 전야벽(田墾勸), 인구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 세금을 균등하게 매기는 부역권(賦役均), 소송을 명확하게 판결하는 소송간(誦訟簡), 도적을 근절하는 도적식(盜賊戢)이 그것이다. 조선은 여기에 교육을 부흥시키는 학교흥(學校興)과 군사를 정비하는 군정수(軍政修)를 추가해서 '수령 7사'를 만들었다. (경국대전, 經國大典)

고려의 수령 5사나 조선의 수령 7사는 모두 구두선(口頭編)이 아니었다. 상급자인 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산하 원님들의 고과를 매겨 조정에 보고했다. 전(殿)은 맨 아래 등급을, 최(最)는 맨 위 등급을 말하는데, 이처럼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을 전좌(殿座)라 했다. 열 번의 평가에서 모두 상(上)을 받으면 승진하지만 한번만 하(下)를 받아도 바로 파직이었다.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봉록이 없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켰고,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이었다.

특히 고위직 출신 원님들에게 더욱 엄격해서 정3품 당상관인 수령은 한 번만 중을 받아도 바로 파직이

었다. 수령 7사 중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소송 판결이었다.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소송에서 원님이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면 불복자는 바로 항의했고, 이는 전좌에서 불리한 고과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노론 일당독재가 계속되면서 국가 기강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선의 원님 재판이 지금보다 공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 파악을 위해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분리시켰다.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기관은 사헌부(司憲府)다.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은 종2품에 불과하지만 이공익은 '연려실기술' '관직전고(官職典故)'에서 "(사헌부 관원이)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한다"고 전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사헌부 정6품 감찰(監察)에 대해 성헌(成憲)은 '감찰청벽기(監察廳淸記)'에서 "감찰이 왔다는 소리만 들러도 사람들이 다 몸을 움츠리고 무서워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런 권위는 수사권 독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사헌부 관료들은 조정 회의 때 다른 관료들보다 먼저 들어갔다가 회의가 끝난 후 다른 관료들이 다 나간 후에 따로 나갔다. 뒤섞이다 보면 청탁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 사헌부는 이처럼 엄격한 처신으로 권위를 쌓았지만 수사권 독점은 없었다. 조선은 사헌부 외에도 임금부·형조는 물론 지금의 경찰청격인 포도정과 한성부에도 수사권을 주었다. 사헌부는

다른 수사 기관들과 경쟁하며 혹독한 자기 관리로 대표 수사기관이 된 것이었다.

사헌부가 수사를 받기하면 즉각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 수사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수사권을 전횡하지 못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사건을 덮지 못했다. 이처럼 분산된 수사권이 검찰에 독점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형사령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 독립은 동가들을 자의적으로 때려잡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전근대적인 수사권 독점은 적폐 청산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검찰과 법원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조선으로 치면 의금부와 비슷하다. 그러나 공수처에 비리가 생긴다면 검찰·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상호 견제가 꼭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한국의 검찰처럼 잘 보여 준 기관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는 무소불위의 청와대에도 해당된다. 청와대에도 불법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공수처는 물론 검찰·경찰도 즉각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 공약, 정책 운운하는 말장난으로 국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 스스로가 주인임을 주지시켰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명제를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개개인은 마음속에 촛불을 켜고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눈을 부릅뜨야 한다.

의료칼럼

간병인 코로나 검사 의무화 시급하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은 중환자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과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초유의 입원 병동 코호트 격리, 외래-수술-응급센터 섯다운을 실시한 이후 지난 12월 1일 입원 병동 코호트 격리를 해제하면서, 외래를 통한 입원 환자의 경우 환자와 상주 보호자는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입원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취합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실 상주 보호자는 비급역로 자기 부담이 된다. 보호자가 간병이 어려운 경우 간병인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해 주어야만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코로나 방역 단계를 격상했지만 연말연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데다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병인의 최근 확진 사례 및 건수는 간병인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인은 전국적으로 총 19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외국인

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력이지만 보건 의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간병인 또는 요양 보호사들은 여러 병원을 돌면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 간병인과 1인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수 검사를 도입하는 의료기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그동안 K-방역을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수고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 준수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 아직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백신 투여가 조만간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야 하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미를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코로나 중환자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즉 중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내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 환자뿐 아니라 상주 보호자 1인 또는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시급하다. 또한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증상이 없던 없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기고

디지털 혁신이 농업에 주는 빛과 그림자



황범수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대비 89만 원(2.1%) 감소했고, 평균 가계 지출은 3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만 원(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 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만 원(20.6%)이 줄었다. 특히 농가 인구는 46년째 감소세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65세 이상 비율이 46.6%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키운 농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농가가 전체의 65%에 달하고, 70%는 경지 규모 1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이다. 이런 현실에서 스마트 농업 정책들이 과연 소작농과 고령농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19년 농가 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이 10.9배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득 하위 20%(1분위) 농가보다 상위 20%(5분위) 농가의 소득이 11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 이처럼 농가 간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부농은 더욱 부농이 되고, 빈농은 더욱 빈농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저수입 농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스마트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의 디지털화·스마트화는 농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짐이 되는 반면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농업의 식량 안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 46.7%로 9.5% 하락했고, 우리나라 연평균 국내 곡물 생산량은 450만 톤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16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곡물 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은 곡물 등 주요 먹거리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세계 쌀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은 지난 3월에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재개했으며, 밀 수출 1위 국가인 러시아 역시 지난 3월에 곡물 수출을 일시 중지하기도 했다. 당장이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게 되면 식량 수입 취약 국가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식량 민족주의로 대공황보다 대붕쇄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농업은 국가의 필수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 국가 운영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더욱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농가의 소득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는 언제나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되새겨 볼 때다.

社說

청렴도 평가 하위권 자치단체 자정 노력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전남도 역시 올해 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도 절반 이상이 4등급 이하에 머물러 지역 지자체의 전반적인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전국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해당 기관에 업무 경험에 있는 국민(외부 청렴도) 및 공직자(내부 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평가 결과 광주시는 외부·내부 청렴도 모두 4등급을 기록해 종합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한동안 광역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던 전남도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반짝 도약하기도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기초 자치단체들도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목포(2등급)와 나주(3등급)를 제외한 광양·여수(4등급), 순천(5등급)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군 단위에선 강진·무안·영광·완도·장흥·함평이 4등급, 고흥·신안은 5등급으로 최하위였으며 구례·담양·보성·진도·해남은 2등급, 곡성·영암·장성·화순은 3등급이었다. 광주 5개 구에서는 동구·북구가 2등급을 받은 데 비해 광산·남·서구는 4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 본 주민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 만큼 지역민이나 자체 청렴도 평가가 그만큼 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렴도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불공정·부조리한 업무 처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반복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공직자들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된 광주 도심…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도시철도 2호선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광주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도 시설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현재 도심 28곳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인 동구 필문대로 가운데 살레시오여고 입구 사거리와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가림막 설치 등으로 도로가 좁아진 데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과 중장비를 실은 트레일러 등의 주정차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아예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트럭과 둘러쳐진 펜스 사이를 주행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된 아파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북구 중흥동 동부교육지원청과 효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경유 출·퇴근 시간대에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이 뒤섞이면서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도심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건설기계·덤프트럭·레미콘 차량 사고는 52건이나 된다. 벌써 전년과 같은 기간의 46건을 넘어섰다. 지난 11월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 앞 스포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 등 일가족 4명이 8.5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당국은 공사가 불가피하다라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공사현장 도로변의 대형 화물차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및 교통지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마천의 사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관중이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로도 잘 알려진 그는 공자·맹자·안연 등과는 사뭇 달랐다. 재물을 모으고, 여색을 밝혔으며, 거짓말도 잘했다. 전투에서 도망치기도 했으며 벼슬자리에서 자주 쫓겨났다. 하지만 포숙아만이 알아보았던 그의 재능은 이 모든 인간적인 허물을 덮어 버렸다.

사마천은 그가 정처하는 법에 대해 '화(禍)를 복(福)으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고 적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인 관중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이가 전혀 시도하지 못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작은 제나라가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 그는 소금을 중심으로 불자를 유통시키고 재물을 축적해 나라를 부유하게 했다. 그는 제나라 정쟁 과정에서 포숙아와 제환공의 반대편에 섰다가 망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숙아의 건의를 받아들인 제환공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용서해 주고 높은 지위를 주었다. 관중은 주변 국가의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영토를 오히려 나누며 주며 제후국의 토대를 닦았다.

그의 외교 정책과 국경 운영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상대방 및 정책 수요자의 미래를 염두에 두는 수준 높은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졌다는 점이 달랐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검찰 갈등,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 등 두 가지 이슈가 오랜 기간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전자는 해결 기미 없이 찬반이 더 격렬해지고, 후자는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 저마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을 임대·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 바 있다.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으며, 아쉽지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 축소와 투기소득 회수 등 보다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화를 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핵심 요소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는 솔직한 자세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02-773-9331)
※구료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